

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2307    |
| 의 퇴 인 | 권향엽의원      |
| 회 답 일 | 2025.7.30. |
| 추계번호  | 25B4037    |

#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므로,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신규로 설치·운영하고, 국가가 설치·운영 비용의 50%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8억 2,000만원, 2031년 21억 8,600만원 등 향후 5년 간 112억 7,400만원(연평균 22억 5,500만원)으로 추계됨

○ 국 비: 향후 5년 동안 56억 3,700만원(연평균 11억 2,700만원)

○ 지방비: 향후 5년 동안 56억 3,700만원(연평균 11억 2,700만원)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 2031  | 합계     | 연평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전세피해지원센터<br>(안 제11조제1항<br>단서신설) |     | 2,820 | 2,042 | 2,089 | 2,137 | 2,186 | 11,274 | 2,255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비  | 1,410 | 1,021 | 1,044 | 1,068 | 1,093 | 5,637  | 1,127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비 | 1,410 | 1,021 | 1,044 | 1,068 | 1,093 | 5,637  | 1,127 |

주 1. 시·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

2. 본 추계는 센터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만을 포함하며,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사업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시행중이므로, 별도로 반영하지 않음

3.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4. 국가가 센터 설치·운영 비용의 50%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1조<br>(전세피해지원센터) | 다음 각 호의 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(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금융·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(이하 “전세피해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<br><u>다만,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</u> | 재량규정<br>의무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   |          | 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함(단서 신설)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|          |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 신설) | 재량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1조<br>(전세피해지원센터) | ○    | • (추계) 시·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산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·운영을 의무화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·운영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부산광역시, 대전광역시, 대구광역시 등 6개소이며, 이들 센터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, 금융 및 주거지원 연계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([참고자료]에서 확인)
  - 현재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광주, 울산, 세종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

출한 설치계획안을 바탕으로 소요비용을 추계함

- 본 추계는 센터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만을 포함하며,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사업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시행중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로 반영하지 않음

- 국회예산정책처 공무원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<sup>1)</sup>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비율이 결정되지 않아, 국가가 소요비용의 50%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
-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로, 설치계획안을 제출한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산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함
  -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, 본 추계에서는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광주, 울산, 세종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기초로 소요비용을 추산함
  - 소요비용은 인건비, 운영비로 구분하여 산정하며,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사업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, 센터에서 실시하는 개별 사업비를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음
- 광주광역시: 필요인원 4인(내부 공무원 3인, 기간제 근로자 1명 고용)으로 구성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(2025.4.)

|            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공무원임금상승률(%) | 3.0  | 2.4  | 2.4  | 2.4  | 2.4  | 2.4  | 2.4  |
| 소비자물가상승률(%) | 1.9  | 2.0  | 2.0  | 2.0  | 2.0  | 2.0  | 2.0  |

2025년 기준 연간 5,000만원 소요 예상

- 인건비: 기간제 근로자 1인 고용(32백만원)
- 운영비: 사무관리비(10백만원), 급식비(4.3백만원), 출장비(2.9백만원)

[표 2] 광주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·운영 비용: 2025년 기준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| 인건비 | 운영비 | 합계 |
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|
| 광주광역시<br>전세피해지원센터 | 32  | 17  | 50 |

주: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
자료: 광주광역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

- 울산광역시: 필요인원 3인(내부 공무원 2인, 기간제 근로자 1명 고용)으로 구성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기준 연간 3,900만원 소요 예상

- 인건비: 기간제 근로자 1인 고용(34백만원)
- 운영비: 사무관리비(3백만원), 급식비(1백만원), 여비(2백만원)

[표 3] 울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·운영 비용: 2025년 기준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| 인건비 | 운영비 | 합계 |
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|
| 울산광역시<br>전세피해지원센터 | 34  | 6   | 39 |

주: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
자료: 울산광역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

- 세종특별자치시: 필요인원 4인(팀장 1명, 팀원 2명, 전담인력 1명)으로 구성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기준 연간 2억 5,300만원 소요 예상

- 인건비
  - 팀장(5급, 80백만원), 팀원(7급 1인, 50백만원, 8급 1인, 40백만원) 2명 고용
  - 변호사, 법무사 자문비(월 8회×15만원×12개월=14.4백만원) 및 전담인력(8급 전

문임기제 45백만원) 1명

- 운영비: 사무관리비(10.8백만원), 자산취득비(초년도 사무장비 및 비품구입, 12.5백만원)

[표 4] 세종특별자치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·운영 비용: 2025년 기준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| 인건비 | 운영비 | 자산취득비 | 합계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|
| 세종특별자치시<br>전세피해지원센터 | 229 | 11  | 13    | 253 |

주: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세종특별자치시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

- 강원특별자치도: 필요인원 4인(내부 공무원 3인, 기간제근로자 1명)으로 구성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기준 연간 1억 1,400만원 소요 예상

- 인건비: 기간제 근로자 1명 고용(34백만원)
- 운영비: 임차료(32백만원), 사무관리비(24백만원), 여비(5백만원), 공공운영비(19백만원)

[표 5]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·운영 비용: 2025년 기준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| 인건비 | 운영비 | 합계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강원특별자치도<br>전세피해지원센터 | 34  | 80  | 114 |

주: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강원특별자치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

- 충청북도: 필요인원 3인(내부 공무원 1인, 기간제근로자 2명)으로 구성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2025년 기준 연간 7,700만원 소요 예상

- 인건비: 기간제 근로자 2명 고용(64백만원)
- 운영비: 사무관리비(2백만원), 여비(5백만원), 자산취득비(추계 첫째 해 소요,

6백만원)

[표 6] 충청북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·운영 비용: 2025년 기준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| 인건비 | 운영비 | 자산취득비 | 합계 |
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|
| 충청북도<br>전세피해지원센터 | 64  | 7   | 6     | 77 |

주: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
자료: 충청북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

- 충청남도: 필요인원 5인(내부 공무원 3인, HUG 파견 2명)으로 구성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기준 연간 8,100만원 소요 예상

○ 운영비

- 사무관리비(23백만원), 임차료(30백만원), 관리비(6백만원), 공공요금(7.2백만원),
- 자산취득비(초년도 사무장비 및 비품구입, 15백만원)

[표 7] 충청남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·운영 비용: 2025년 기준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| 인건비 | 운영비 | 자산취득비 | 합계 |
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|
| 충청남도<br>전세피해지원센터 | -   | 66  | 15    | 81 |

주: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
자료: 충청남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

- 전북특별자치도: 필요인원 4인(센터장 1명, 팀장 1명, 직원 2명)으로 구성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기준 연간 4억 9,600만원 소요 예상

○ 인건비

- 센터장(5급, 70백만원) 1명, 팀장(6급, 60백만원) 1명, 직원(8급 45백만원) 2명 등 전문임기제 고용
- 변호사, 법무사 자문비(30시간×8만원×52주=124.8백만원)
- 심리상담사: (8시간×3만원×52주=12.5백만원)

○ 운영비

- 홍보비(2백만원), 교육비(1.6백만원), 임차료(12백만원), 사무관리비(6백만원), 여비(4.8백만원), 공공요금(12백만원)
- 자산취득비 등(자산취득비 10백만원 + 사무실 리모델링 90백만원 =100백만원)은 추계 첫해만 소요

[표 8] 전북특별자치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·운영 비용: 2025년 기준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| 인건비 | 운영비 | 자산취득비 등 | 합계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|-----|
| 전북특별자치도<br>전세피해지원센터 | 357 | 39  | 100     | 496 |

주: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전북특별자치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

□ 전라남도: 필요인원 4인(센터장 1명, 팀장 1명, 팀원 1명, 변호사 1명)으로 구성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기준 연간 12억 8,900만원 소요 예상

○ 인건비

- 센터장(전문임기제 나급, 86백만원) 1명, 팀장(3급, 84백만원)1명, 팀원(5급, 68백만원), 변호사(전문임기제 다급 74백만원) 1명 등 고용
- 기관부담금: 62백만원(연금부담금, 퇴직급여 포함)

○ 운영비

- 사무관리비(22백만원), 행사운영비(12백만원), 임차료(68백만원), 공공요금(28백만원), 홍보비(10백만원), 여비(5.8백만원), 차량유지비(12백만원), 포털구축(100백만원), 지급수수료(1.2백만원)
- 사무실보증금 656백만원(추계 첫해 소요)에만 발생

[표 9] 전라남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·운영 비용: 2025년 기준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| 인건비 | 운영비 | 임차보증금 | 합계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|
| 전라남도<br>전세피해지원센터 | 374 | 259 | 656   | 1,289 |

주: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전라남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

□ 경상북도: 필요인원 5인(내부 공무원 5명 활용, HUG 2명 파견)으로

구성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기준 연간 7,000만원 소요 예상

- 인건비: 변호사 자문비(4시간×7만원×주3회×48주=40백만원)
- 운영비
  - 사무관리비(15백만원)
  - 자산취득비(초년도 사무장비 및 비품구입, 15백만원)

[표 10] 경상북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·운영 비용: 2025년 기준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| 인건비 | 운영비 | 자산취득비 | 합계 |
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|
| 경상북도<br>전세피해지원센터 | 40  | 15  | 15    | 70 |

주: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
 자료: 경상북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

□ 경상남도: 필요인원 4인(팀장 1명, 팀원 2명, 전담인력 1명)으로 구성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기준 연간 2억 5,300만원 소요 예상

- 인건비
  - 팀장(5급, 80백만원) 1명, 팀원(7급, 50백만원 1명, 8급 40백만원 1명) 2명 고용
  - 변호사, 법무사 자문비(8회×15만원×12개월=14.4백만원) 및 전담인력(8급 전문임기제 45백만원) 1명
- 운영비
  - 사무관리비(11백만원)
  - 자산취득비(초년도 사무장비 및 비품구입, 1,250만원)

[표 11] 경상남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·운영 비용: 2025년 기준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| 인건비 | 운영비 | 자산취득비 | 합계  |
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|
| 경상남도<br>전세피해지원센터 | 229 | 11  | 13    | 253 |

주: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
 자료: 경상남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

□ 제주특별자치도: 기존 조직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

## 2025년 기준 연간 500만원 소요 예상

- 운영비: 사무관리비(5백만원)

[표 12]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·운영 비용: 2025년 기준  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          | 인건비 | 운영비 | 합계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|
| 제주특별자치도<br>전세피해지원센터 | —   | 5   | 5  |

주: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제주특별자치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

- (추계결과) 개정안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므로,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신규로 설치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

[표 1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  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|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   |
|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광주광역시   | 인건비   | 34   | 35   | 36   | 37   | 37   | 178   |
|         | 운영비   | 18   | 18   | 19   | 19   | 19   | 93    |
|         | 소계    | 52   | 53   | 54   | 56   | 57   | 272   |
| 울산광역시   | 인건비   | 35   | 36   | 37   | 38   | 39   | 184   |
|         | 운영비   | 6    | 6    | 6    | 7    | 7    | 32    |
|         | 소계    | 41   | 42   | 43   | 44   | 45   | 217   |
| 세종특별자치시 | 인건비   | 241  | 246  | 252  | 258  | 264  | 1,262 |
|         | 운영비   | 11   | 11   | 12   | 12   | 12   | 58    |
|         | 자산취득비 | 13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13    |
|         | 소계    | 265  | 258  | 264  | 270  | 277  | 1,333 |
| 강원특별자치도 | 인건비   | 35   | 36   | 37   | 38   | 39   | 185   |
|         | 운영비   | 83   | 85   | 87   | 88   | 90   | 433   |
|         | 소계    | 118  | 121  | 124  | 126  | 129  | 618   |
| 충청북도    | 인건비   | 67   | 68   | 70   | 71   | 73   | 349   |
|         | 운영비   | 7    | 7    | 8    | 8    | 8    | 38    |

|         |              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 2031  | 합계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        | 자산취득비          | 6     | —     | —     |       | —     | 6      |
|         | 소계             | 80    | 76    | 77    | 79    | 81    | 393    |
| 충청남도    | 인건비            | —     | —     | —     | —     | —     | —      |
|         | 운영비            | 69    | 70    | 71    | 73    | 74    | 357    |
|         | 자산취득비          | 16    | —     | —     | —     | —     | 16     |
|         | 소계             | 84    | 70    | 71    | 73    | 74    | 373    |
| 전북특별자치도 | 인건비            | 375   | 384   | 393   | 402   | 412   | 1,965  |
|         | 운영비            | 40    | 41    | 42    | 42    | 43    | 208    |
|         | 자산취득비          | 104   | —     | —     | —     | —     | 104    |
|         | 소계             | 519   | 424   | 434   | 445   | 455   | 2,277  |
| 전라남도    | 인건비            | 392   | 401   | 411   | 421   | 431   | 2,055  |
|         | 운영비            | 269   | 275   | 280   | 286   | 292   | 1,402  |
|         | 임차보증금          | 656   | —     | —     | —     | —     | 656    |
|         | 소계             | 1,317 | 676   | 691   | 707   | 722   | 4,113  |
| 경상북도    | 인건비            | 42    | 43    | 44    | 45    | 46    | 220    |
|         | 운영비            | 16    | 16    | 16    | 17    | 17    | 81     |
|         | 자산취득비          | 16    | —     | —     | —     | —     | 16     |
|         | 소계             | 73    | 59    | 60    | 62    | 63    | 317    |
| 경상남도    | 인건비            | 241   | 246   | 252   | 258   | 264   | 1,262  |
|         | 운영비            | 11    | 11    | 12    | 12    | 12    | 58     |
|         | 자산취득비          | 13    | —     | —     | —     |       | 13     |
|         | 소계             | 265   | 258   | 264   | 270   | 277   | 1,333  |
| 제주특별자치도 | 운영비            | 5     | 5     | 5     | 6     | 6     | 27     |
| 합계      |                | 2,820 | 2,042 | 2,089 | 2,137 | 2,186 | 11,274 |
|         | 국비<br>(A×0.5)  | 1,410 | 1,021 | 1,044 | 1,068 | 1,093 | 5,637  |
|         | 지방비<br>(A×0.5) | 1,410 | 1,021 | 1,044 | 1,068 | 1,093 | 5,637  |

주 1. 시·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

2. 본 추계는 센터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만을 포함하며,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사업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시행중이므로, 별도로 반영하지 아니함

3.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4. 국가가 센터 설치·운영 비용의 50%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

## 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시·도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, 향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대한 시·도의 사업계획 수립이 확정될 경우 추계값은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는 센터 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만을 포함하며,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사업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시행중이므로, 별도로 반영하지 아니함

## 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| 문지은 | 김신애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 |
| 문지은 | 02-6788-4645 | mtsophia@assembly.go.kr |

## [참고자료]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운영현황

시·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

| 지역 | 개소 연월    | 운영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운영예산<br>(사업비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 | 2023년 2월 | 총 15명<br>- 내부인력: 9명<br>- 변호사: 2명<br>- 법무사: 2명<br>- 공인중개사: 2명                 | <div>[개요]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세사기 피해 접수·조사</li> <li>○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</li> </ul> <div>[실적('23.~'25.)]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세사기 피해 접수: 10,962건 (7,644건 인정)</li> <li>○ 법률상담 지원('23. 2.~'25. 3.): 31,216건(방문, 전화, 온라인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23.5백만원('25년)<br>- 인건비(전문가근무수당): 323.5백만원                 |
| 부산 | 2023년 4월 | 총 12명<br>- 부산시: 7명<br>- 주택도시보증공사: 1명<br>- 변호사: 1명<br>- 법무사: 2명<br>- 심리상담: 1명 | <div>[개요]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세사기 피해 접수·조사</li> <li>○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·심리 상담 지원</li> <li>○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·주거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</li> <li>- 민간주택 월세 지원</li> <li>- 이주비 지원</li> <li>- 주거안정지원금</li> </ul> </li> </ul> <div>[실적('23.~'25.)]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세사기 피해 접수: 4,097명 신청(2,986명 인정)</li> <li>○ 법률지원: 3,361건</li> <li>○ 심리상담 지원: 4,073건</li> <li>○ 금융·주거 지원: 5,724건(45.3억원 집행)</li> </ul> | 145백만원('25년)<br>- 법률지원(변호사, 법무사수당): 117백만원<br>- 운영비: 28백만원 |
| 대구 | 2024년 9월 | 총 8명<br>- 대구시: 5명<br>- 국토교통부 지원: 2명<br>- 주택도시보증공사: 1명<br>- 법무사: 2명           | <div>[개요]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세사기 피해 접수·조사</li> <li>○ 전세피해임차인에게 법률·금융·주거·심리상담 및 지원정책 연계·안내</li> </ul> <div>[실적('23.~'25.)]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생활안정지원금: 412건(3.7억원)</li> <li>○ 이주비 지원: 32건(0.3억원)</li> <li>○ 금융·주거 지원: 5,724건(45.3억원 집행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5백만원('25년)<br>- 운영비: 15백만원<br>- 변호사 법률상담: 40백만원           |

| 지역 | 개소 연월                       | 운영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운영예산<br>(사업비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인천 | 2023년 3월<br>(‘23. 1. 임시개소)  | 총 9명<br>- 인천시: 5명<br>- 기간제근로자: 1명<br>- 주택도시보증공사: 1명<br>- 법무사: 1명<br>- 대한법률구조공단: 1명               | <p>[개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세사기 피해 접수, 금융·주거·법률지원 및 상담</li> <li>○ 경·공매 원스톱서비스 접수 및 상담이력관리제 운영</li> <li>○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</li> <li>- 월세 한시 지원</li> <li>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</li> <li>- 긴급생계비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 <p>[실적(‘23.~’25.)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세사기 피해 접수: 4,129건 (3,212명 인정)</li> <li>○ 경·공매 원스톱서비스: 256건</li> <li>○ 상담 이력 관리: 229건</li> <li>○ 주거·금융·법률 등 상담: 5,646건</li> <li>○ 유선 종합상담: 12,234건</li> <li>○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: 2,765건(사업비 예산 40.1억원)</li> </ul> | 64백만원(‘25년)<br>- 운영비(인건비포함): 64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전 | 2024년 1월<br>(‘23. 11. 임시개소) | 총 10명<br>- 공무원(파견 포함) 7명<br>- 법무사: 2명<br>- 주택도시보증공사: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[개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세사기 피해 접수·조사</li> <li>○ 법률·금융 전문가 상담</li> <li>○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거안정지원금</li> <li>- 공공주택 입주 시 이사비용 지원</li> <li>- 민간주택 이주 시 월세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 <p>[실적(‘23.~’25.)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: 3,333건</li> <li>○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: 1,983명 신청(16.2억원 집행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8.6백만원(‘25년)<br>- 운영비: 18.6백만원<br>- 인건비: 국토교통부 지원(법률·금융상담 인력)으로 미지급  |
| 경기 | 2023년 5월<br>(‘23. 3. 임시개소)  | 총 24명<br>- 경기도시주택공사 (파견 공무원 포함): 15명<br>- 콜센터 용역: 4명<br>- 주택도시보증공사: 1명<br>- 변호사: 2명<br>- 법무사: 2명 | <p>[개요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세사기 피해 접수·조사·현황 분석</li> <li>○ 전세사기 대응·예방 관련 교육 및 설명회 개최</li> <li>○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·법률 상담</li> <li>○ 이주비 및 생계비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긴급생계비 지원</li> <li>- 이주비 지원</li> <li>-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긴급 관리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524백만원(‘25년)<br>- 인건비: 641백만원<br>- 콜센터 용역비: 160백만원<br>- 운영비: 723백만원 |

| 지역 | 개소 연월 | 운영인력 | 사업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운영예산<br>(사업비 제외) |
|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|       |      | [실적('23.~'24.)]<br>○ 전세사기 피해 접수: 8,248건 신청(2,986명 인정)<br>○ 이주비 및 생계비 지원: 4,578건(46억원 집행) |                  |

자료: 시도 제출자료(2025년 4월 기준)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